
서평

한국민주화운동사 연구의 이정표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엮음, 『한국민주화운동사 1』, 돌베개, 2008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엮음, 『한국민주화운동사 2』, 돌베개, 2009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엮음, 『한국민주화운동사 3』,

돌베개, 2010 이만열

한국민주화운동사 연구의 이정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엮음, 『한국민주화운동사 1』, 돌베개, 2008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엮음, 『한국민주화운동사 2』, 돌베개, 2009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엮음, 『한국민주화운동사 3』,
 돌베개, 2010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는 『한국민주화운동사』 3권을 엮어 출판했다. 한국민주화운동사를 언급하기에 앞서 먼저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것이 있다.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 생명까지 내 던진 많은 민주 열사들이다. 그들의 영전에 경건하게 머리 숙여 감사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누리고 있는 민주화의 과실은 그들 선진들이 생명을 담보로 쟁취하여 남겨준 유산이기 때문이다. 그분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한국민주화운동을 논하는 것도, 한국민주화운동사를 쓰는 것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민주화를 위해 목숨을 내던졌던 선진들의 그 위대한 용기와 희생은 이명박 정권하에 의식없이 살아가고 있는 한국인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다. 민주화에 역행하면서도 뻔뻔하게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양 위장하

고 강변하는 이 정권과 그런 비민주화에 타협하면서 비겁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화를 위해 희생되었던 선진들의 민주화운동은 타협과 변명으로 묵종하는 이 시대 사람들로 하여금 역사의 무임승차자임을 경고하고 있다.

민주화의 도정에서 본다면, 현재는 역주행의 시대다. 그러기에 이를 감행하는 정권이나 거기에 타협하고 침묵하는 국민들이나 모두 민주화의 도정에서 반민주적인 행위로 낙인찍힐 수밖에 없다.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 유명을 달리한 거룩한 영령뿐만 아니라, 민주화를 위해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으신 여러 선후배와 동료들을 향해서도 오늘 이 역주행의 시대에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자신을 자각하면서 깊은 회한과 좌절을 느낀다. 따라서 이번에 출간된 『한국민주화운동사』가 한국 민주화의 좌표를 새롭게 점검하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한국의 민주화운동은 우리 역사에서 아주 독특한 위치에 있다. 이미 언급했지만, 오늘날 우리가 세계에 이것저것 내 놓을 것이 많은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민주화를 전제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내 놓을 것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룩했다고 자랑하려는 경우에도 그렇거니와 일각에서 편파적으로 ‘산업화’를 내세우려는 경우에도 그 전제요 토대가 되는 것이 민주화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화 없이는 산업화도 근대화도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한국 민주화운동사』의 출간은 바로 그걸 제대로 알리는 귀한 기회가 되었다는 점에서 축하를 받아야 한다.

한국의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새삼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다. 민주화를 통해 한국 사회가 역동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에 국내외에서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그 이면에 “민주화를 위해 얼마나 많은 투쟁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렀는가는 대개의 경우 간과하고 있(1권 13쪽)”는 실정이다. 한국에는 1919년 ‘민주공화국’임을 선포하면서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 이후 전개

되었던 이승만 독재에 항거하여 일으킨 최초의 성공한 민주혁명인 1960년 4월혁명, 굴욕적 한일협정에 반대하여 일으킨 6·3운동, 3선개헌반대 투쟁, 유신반대투쟁, 5·18민주화운동, 1980년대의 자주화투쟁과 민주화운동, 1987년의 6월민주항쟁 등에서 많은 희생이 뒤따랐던 것이다. 그것은 곧 민주주의 국가를 수립하는 과정이었고, 민주화 사회를 이룩하는 투쟁의 과정이었다. 한국의 민주화운동을 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한국민주화운동사』의 구성과 민주화운동의 개념 규정

『한국민주화운동사』는 주요 시기별로 구분되어 세 권으로 묶었다. 전 3권 2,400쪽이 넘는 이 책은 그 목차만 해도 방대하다. 부와 장과 절로 나뉜 목차는 각 부의 제목만 보아도 이 책의 구성과 성격을 대강 살필 수 있다.

- 제1권 제1공화국에서 제3공화국까지(1948~1971)
 - 1부 이승만 정권과 4월혁명
 - 2부 4월혁명 직후의 민주화운동
 - 3부 박정희 정권과 유신 이전의 민주화운동
- 제2권 유신체제기(1972~1979)
 - 1부 유신체제의 성립과 유신 전기 반독재민주화투쟁의 전개
 - 2부 긴급조치 9호와 유신 후기 반독재민주화투쟁
 - 3부 각 부문에서의 민주화운동
- 제3권 서울의 봄부터 문민정부 수립까지(1980~1992)
 - 1부 신군부의 등장과 5·18민중항쟁
 - 2부 전두환 정권과 반독재민주화 투쟁

3부 6월민주항쟁과 민주화 이행

4부 노태우 정권과 반독재민주화 투쟁

5부 각 부문의 민주화운동

각 권에서는 각각의 총론을 두고 각 권에 해당하는 민주화운동의 배경과 전개과정을 개괄적으로 서술했다. 이어서 각 권 민주화운동의 성격 및 성과와 한계도 언급하고 있다. 특별히 제1권의 총론에서는 총 3권의 서론 격으로 먼저 한국민주화운동의 시기와 범위 및 그 종류를 논했다. 한국민주화운동은 단일사건, 단기간에 끝난 것이 아니고 매우 오래 진행되어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그 시기를 1960년의 4월혁명에서 1992년의 문민정부 수립까지로 잡고 있다.

한국의 민주화운동이 이렇게 오랜 기간 이뤄졌다고 보는 데는 민주화운동의 개념 규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민주화운동은 기본적으로 반독재투쟁을 의미하지만, 한국은 반민주적 요인이 여러 상황들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반민주적인 요인을 극복하려는 제반 운동을 민주화운동으로 보고 그 외연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의 반민주적 요인에는 과거 제국주의와 분단체제가 남겨놓은 것들이 크므로, ‘통일운동이나 한일협정반대투쟁도 민주화운동의 일환으로’ 간주했다. 이 책은 노동, 농민, 빈민 운동도 중요한 민주화운동으로 보았다. 이는 역대 정권이 노동자 농민, 빈민들을 탄압해 왔던 점에 비춰본다면, 이 운동들이 이들의 인권을 신장시키고 인간해방에 기여하기 때문에 민주화운동으로 보았던 것이다. 또 부정부패와 비리에 대한 투쟁도 권위주의 정권의 민주화와 사회의 민주화를 촉진시켰다는 점에서 민주화운동으로 보았다. 과거사 진상규명운동도 인권을 지켜 민주주의를 한 단계 높였기 때문에 민주화운동으로 인식했다. 따라서 이 책이 정의하는 민주화운동은 “억압으로부터의 자유와 자율을 확대시키고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진전시키는 운동, 냉전체제·진영논리를 벗어나 민족의 자주성을

확보하려는 운동이나 통일운동, 민중의 생존권과 더 나은 삶을 위한 투쟁은 어느 것이나 민주화운동(1권 15쪽)”으로 보고 이를 역사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제1권 제1공화국부터 제3공화국까지

제1권은 이승만 정권의 성립에서부터 박정희 정권의 유신 이전까지의 민주화운동을 다루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 이승만 정권은 6·25한국전쟁을 맞아 부산정치파동을 비롯하여 민주주의를 유린하면서 헌정질서를 파괴해 갔다. 이승만 정권은 야당을 탄압하고 진보당 창당을 방해했으며, 급기야는 조봉암을 사형하는 데까지 이르러 ‘진보당사건’을 일으켰다. 뿐만 아니라 각종 필화사건과 경향신문 폐간 등과 같은 언론탄압을 가했다. 그리고 이승만은 1952년 직선제로 대통령선거를 바꾼 이래 자신의 영구집권을 위한 대통령중임제를 폐지하는 사사오입 개헌을 감행하고, 각종 선거에 관권을 개입시켜 부정선거를 조직화하여 민주주의를 압살했다. 이러한 이승만 정권의 민주주의 유린에 저항하면서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일으킨 것이 4월혁명이다.

제1권에서는 4월혁명의 과정과 성격 그리고 의의를 자세히 다루었다. 4월혁명의 의의는 “반독재 민주, 반외세 민족자주, 반분열 통일, 반부패특권 민주”으로 정리했는데, 1950년대까지도 남아 있던 관준민비, 남존여비 등의 봉건적이고 퇴영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정신혁명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4월혁명 직후의 민주화운동과 대중운동, 진보적 사회운동 및 새로운 통일운동을 다루었다. 그러나 5·16쿠데타로 박정희가 집권함으로써 4월혁명을 통해 조성된 새로운 민주화운동은 시련을 맞게 되었다.

제1권 3부의 ‘박정희 정권과 유신 이전의 민주화운동’은 군사쿠데타 후 약 10년 동안의 민주화운동을 다루었다. 제3부는 한일협정 반대투쟁, 6·8부정선거 규탄투쟁과 3선개헌 반대투쟁, 학원병영화 반대투쟁과 민

주수호투쟁, 민중생존권투쟁의 분출(전태일의 분신과 광주대단지사건)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한일협정투쟁’은 1960년대에 들어서서 동아시아전략을 조정할 미국의 중용에 따라 열린 한일회담에 반대하여 일으킨 것이다. 5·16쿠데타 후 군사정권은 ‘경제개발’을 위해 막대한 자본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를 일본에서 조달하려고 하여 한일회담을 서둘렀다. 이 과정에서 국민적 저항에 부딪치게 되었다. 한일회담 반대투쟁 과정에서 학생들에 의한 ‘6·3시위사태’가 일어났다. 1965년 6월 22일 한일기본조약의 조인을 전후해서는 조인반대투쟁과 비준반대투쟁, 비준무효화투쟁이 각각 발생했다. ‘6·8부정선거 규탄투쟁과 3선개헌 반대투쟁’은 1965년 베트남파병 반대투쟁에서 시작하여 1967년의 ‘6·8부정선거’ 규탄으로 이어졌고, 1969년에는 3선개헌 지지투쟁에 나서게 되었다. 이는 1967년 대통령 선거에서 신승한 박정희가 1969년에 들어서서 자신의 영구집권을 위해 대통령의 중임 조항을 규정한 헌법을 고치려 한 것에 대한 반대투쟁이었다.

개헌이 통과됨으로 1971년 박정희는 3선에 나서게 되었다. 박정희는 김대중과의 대결에서 승리한 그 이듬해에 유신체제를 선포했다. 이에 대해 전개되었던 학원병영화 반대투쟁과 각종 민주수호 투쟁, 즉 1971년 양대 선거와 학생운동, 박정희 정권의 지식인 통제와 사법부 파동, 학생들의 교련 철폐투쟁 재개와 국가비상사태 선포 등을 다루었다. 더불어 도시빈민층과 노동자들의 생존권투쟁이 격렬하게 진행되었다. 이때 전태일의 분신과 광주대단지사건은 그 뒤 사회적 파장을 크게 일으켰고, 한국의 노동운동 및 도시빈민운동사에 큰 획을 그었다.

제2권 유신체제기

제2권은 유신체제기의 민주화운동을 다룬 것으로, 이 암울한 독재시기를 극복함으로써 높은 단계로 도약하게 되었다. 이 시기를 정확하게 고찰하기 위해 유신체제의 성립과정과 그 구조 및 통치이념에 관한 내용

을 다루었다. 1972년 7월 남북공동성명의 공포와 남북회담의 진행으로 남북관계에 희망을 갖게 했다. 그렇지만 그 해 10월에 유신이 단행되었고, 이는 남북정권이 남북관계를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 확대를 위해 활용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한다. 북한도 그해 12월 27일에 ‘사회주의헌법’을 공포·발표하여 정권을 강화시켰던 것이다. 유신체제의 기본이념은 조국근대화론을 근거로 “민족중흥의 과업을 완수키 위해 민족의 에너지를 총동원하고 국력을 조직화하고 능률을 극대화(2권 80쪽)”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그 체제하의 한국사회는 일제 말기의 “군국주의나 전체주의 체제와 부분적으로 닮아간 측면이 존재(2권 86쪽)”했다.

1972년 12월부터 유신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투쟁이 시작되었고, 그 이듬해 4월에는 기독교계의 ‘남산부활절연합예배사건’이 일어났다. 이어서 7월에 발생한 ‘김대중 납치사건’을 계기로 10월에는 학생들의 반유신 투쟁이 한층 강화·확대되었다. 12월에는 유신헌법 개정을 요구하는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유신정권은 유신헌법에 관한 논의 자체를 금지시키는 긴급조치 제1호와 제2호를 발동했다. 또한 ‘민청학련’ 사건을 계기로 긴급조치 제4호를 발동하고, ‘인민혁명당’ 사건을 조작하는 등 유신정권의 민주화운동 탄압은 긴급조치 제9호까지 이르렀다.

유신체제는 긴급조치 제9호의 발동과 함께 그 포악함이 절정에 도달했고, ‘부마항쟁’으로 붕괴했다. 이에 관한 내용은 제2권 2부 3장에서 다루고 있다. 1975년 4월 30일 남베트남이 항복하고 베트남이 통일되자, 박정희는 5월 13일 기존 긴급조치의 내용들을 종합하여 유신헌법을 신성불가침의 영역에 올려놓았다. 한편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긴급조치 제9호를 발동했다. 그 내용은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하는 행위,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헌법을 부정·반대·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그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청원·선동 또는 선전하는 행위, 이 조치를 공공연히 비방하는 행위, 그리고 사전허가를 받지 않은 학생의 집회·시위 또는 정치 관여 행위를 금지하였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주무 장관이 위반자와 ‘범행’ 당시의 소속 학교, 단체나 사업체 또는 그 대표자에 대하여 제적·해임·해산·폐쇄·면허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아울러 이 조치에 의한 주무장관의 명령이나 조치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2권 181쪽)”는 것이었다. 그러자 민주화운동은 더욱 격화되었다. 저자들은 1976년 3·1구국선언에 이어 복잡하게 연면한 재야민주화연대조직의 유신철폐운동을 다루었는데, 특히 부마항쟁에 이르는 과정을 자세히 다루었다. 유신체제의 종언을 고하게 만든 부마항쟁과 관련해서는 발생배경이 되는 유신체제 말기의 정치·사회적 위기구조에서부터 시작하여 부산 및 마산 지역의 상황을 전국적 상황과 연계 서술하면서 ‘10·26정변’으로 유신정권이 붕괴되는 과정을 살폈다.

제2권 3부는 ‘각 부문에서의 민주화운동’을 다루었다. 종교계의 민주화운동을 비롯하여 언론·출판계의 민주화운동, 지식인과 문화예술인의 민주화운동, 인권운동, 민중운동 등으로 각 장이 구성되었다. 이는 유신체제의 민주화운동이 상호 유기적 성격을 갖고 있기도 하거니와 그 시기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극도로 제약받는 상황에서 각 부문별 민주화운동이 독자적으로 활성화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유신체제의 민주화운동이 각 부문별 민주화운동으로 다뤄진 것은 이에 기인한다. 3부에서는 이 시기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감당한 종교계의 민주화운동을 먼저 다루고, 이어서 언론·출판계, 지식인·문화예술계 인사들, 노동자·농민·도시빈민들의 민주화운동도 다루고 있다. 유신체제는 민주 국가에서 누려야 할 천부적 인권이 말살되는 시기였고, 그 피해는 노동자, 농민 및 도시빈민들에게 미쳤다. 따라서 민주화운동은 인권운동 및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들의 민중운동과 나란히 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제2권에서는 이 부문에까지 민주화운동의 외연을 확대하여 다루고 있음이 주목된다.

제3권 서울의 봄부터 문민정부 수립까지

유신체제의 붕괴와 더불어 민주화가 달성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신군부의 등장으로 민주화의 여망은 여지없이 무산되었다. 제3권에서는 신군부의 등장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의 민주화운동을 다루고 있다. 10·26정변 후 ‘서울의 봄’을 맞이하여 정치개혁은 물론 학원민주화운동도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그러나 박정희 군사정권의 품에서 양육된 특수군사집단인 신군부는 ‘12·12 군사반란’을 일으켜 일단 군권을 장악했다. 이렇게 되었는데도 정치권은 ‘3김’을 중심으로 갈등하면서 유신체제 철폐와 민주화운동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 신군부가 유신체제 붕괴에 따른 정치적 공백기를 교묘하게 파고들어 불법적으로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 변란을 꾸몄고, 거기에 대응하여 5·18민주화운동이 일어났으나, 신군부는 계엄군을 동원하여 무참하게 이를 ‘진압’하고 전두환 정권을 성립시켰다. 그러나 1987년 ‘6월민주항쟁’과 ‘87노동자대투쟁’은 신군부를 굴복시켜 대통령 직선제를 주요골자로 한 ‘6·29선언’을 받아냈다.

6월민주항쟁의 성과로 헌법을 대통령 직선제로 개정했으나, ‘양김’의 분열은 신군부체제를 온존하게 했고, 그만큼 민주화를 지연시켰다. 노태우 정권기에는 보수대연합을 통해 민주화운동에 찬물을 끼얹기도 했다. 이 책은 1987년 이후의 민주화운동을, ‘민주화 이후’의 민주화운동, ‘1991년 5월투쟁’ 및 ‘시민사회’의 등장 등으로 구분하여 다루었다. 제3권에서도 ‘각 분야의 민주화운동’을 다루고 있는데, 제2권에서 다룬 종교계, 언론·출판계, 교육계와 학계, 문화·예술계, 노동·농민·도시빈민 및 인권운동을 심화·확대시켰다. 한편, 여성운동과 통일운동도 민주화운동으로 수렴하여 서술함으로써 한국민주화운동의 영역을 넓혔다.

앞에서 언급한 내용을 큰 줄거리로 하여 서술한 『한국민주화운동사』 제1, 2, 3권은 유형별로 보면 몇 개의 큰 흐름이 착종하면서 정부수립 이후 1990년대 초 문민정부 수립까지의 역사를 정리했다. 그것은 민주화의 대상이 된 부정부패, 부정선거, 군사독재 등의 큰 흐름과 이러

한 부정적 유산을 극복·청산하고 인권과 민주주의를 이룩하려는 민주화의 흐름을 들 수 있다. 이와 함께 민주화를 토대로 산업화를 이룩해 가는 동안 갈등관계에 들어가고 있는 자본 세력과 노동자·농민 간의 갈등도 엿볼 수 있다. 이 경우의 갈등은 생존권 차원의 투쟁으로 전개되고 있다. 한편 남북분단으로 인해 전개되는 안보론과 통일론 간의 갈등도 한국민주화운동의 큰 흐름으로 서술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서로 착종되어 이 세 권의 책을 형성했다.

민주화운동의 흐름과 영역

이미 언급했지만, 두 계통으로 흐르는 사건들을 유형화해 볼 수 있다. 민주화의 대상이 되는 사건들로 이승만의 독재와 부정선거, 박정희의 ‘한일국교정상화’ 회담과 3선개헌안 처리 그리고 유신정권 등을 들 수 있으며, 신군부 치하에서는 체육관 대통령 선거를 비롯한 파쇼적인 제반 체제를 들 수 있다. 이런 행태들을 극복하기 위해 전개된 민주화운동의 흐름은 크고 작은 운동들이 지류를 이루고, 30여 년간 면면히 이어지면서 큰 흐름으로 합류하는데, 한국민주화운동의 분수령은 4월혁명을 비롯하여 5·18민주화운동, 6월민주항쟁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세류와 지류가 본류로 흘러가는 과정에서 때로는 마치 오늘날의 정권 같은 역류에 부딪치기도 하지만, 그런 역류를 헤쳐 가며 대하를 이루어 한국민주화운동의 대해를 형성해 갔던 것이다. 이와 함께 한국민주화운동을 이룬 대하에는 시간차를 두고 나타난 지류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분야별로도 세류와 지류가 있었다. 제2권의 3부와 제3권의 5부에서 다룬 ‘각 부문의 민주화운동’이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거기에는 종교계의 민주화운동을 비롯하여 언론·출판계의 민주화운동, 교육계·학계 등 지식인의 민주화운동, 문화예술인의 민주화운동, 인권운동 및 노동자·농민·도시빈민 중심의 민중운동, 여성운동 및 통일운동이 포함되었다. 부문별 민주화운동은 그 자체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효과도 나타냈지만, 부

문 간의 연대세력을 형성함으로써 서로를 격려하는 상승효과도 나타나게 되어 민주화운동을 촉진시키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특이한 것은 통일운동을 민주화운동의 영역의 중요한 산물이라고 인식하는 이 책의 역사의식이다. 이러한 인식이 가능했던 것은 민주화운동을 가로막고 있던 군사정권이 자신들의 독재화·반민주화의 논리와 그 정당성을 민족 분단의 현실에서 찾으려 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다시 말하면 휴전선을 경계로 남북으로 분단된 우리의 분단 상황이 인권과 민주화를 용납하지 못하도록 몰아갔기 때문이다. 군사정권의 논리에 따르면, 분단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 안보인데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서구 선진 사회에서 무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인권·민주의 이념을 분단 한국에서는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한국의 인권·민주화가 차원 높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군사정권이 내세우는 상투적인 안보 논리를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안보 논리는 분단체제를 토대로 자신의 논리를 정당화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시기의 인권·민주화운동을 위해서는 안보논리의 배경이 되는 분단체제를 극복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 시기의 민주화운동은 바로 분단체제를 타깃으로 하여 이를 허무는 통일운동에 매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 시기의 통일운동이 민주화운동의 범주에 자리 잡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책에서 서술된 ‘민주화운동’은 그 개념의 복합성을 드러내 주고 있다. 앞에서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민주화운동이란 개인이나 공동체의 자유와 자율을 확대하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수호 신장하며, 제도적으로 민주주의 제반 제도를 진전시키는 운동을 말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동서냉전 체제하 사상적 제약이 심한 상황에서는 사상의 자유를 위한 투쟁도 민주화운동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사상적·인간적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 분단이라는 특수한 구조 하에서 이뤄졌던 만큼, 분단을 해소하려는 통일운동이 민주화운동의 큰 흐름에 속한다고 보았다. 또 인간의 생존권을 제약하는 것이 국가권력과 그것과 밀접하게 연

계되어 있는 자본권력이라고 할 때, 자본의 논리와 권력으로부터 민중의 생존권을 확보하려는 제반 운동들, 즉 노동운동과 농민운동, 빈민운동 등도 민주화운동의 영역에서 다뤄지지 않을 수 없었다.

한편 민주화운동이란 반민주적 제도와 상황을 극복하는 데서 가능한 것이었다. 그랬던 만큼 이 책은 당시의 반민주적인 제반 상황을 먼저 연구·서술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시의 반민주적 상황이란 단순히 어떤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의 문제였다. 아무리 헌법을 비롯한 제도가 멀쩡하게 ‘민주적’이라고 해도 그것을 움직이는 정당이 나 관료나 사회적인 관행이 비민주적이고 사회정의에 어긋나는 것이면, 그 헌법이나 이념을 공동체 속에 실현하여 민주적인 사회로 격상시킬 수 없었다. 민주화운동은 이런 사회 전반에 걸친 비민주적인 구조를 극복하는 과정이기도 해서 집권층의 부패나 권력기구를 통해 활동하는 관료들의 비민주적 행태도 주목의 대상이 아닐 수 없었다. 이와 함께 중요한 것은 정당의 존재다. 정당의 부침(浮沈)이 민주화운동의 영역에서 다뤄진 것은 민주주의가 여론 수렴을 통해 중론을 형성하는 과정이 필수적인 상황이므로, 그 중론을 수렴하는 기구로서 정당의 존재와 그 활동을 다루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성과

자료를 수집, 안배하고 편차를 짜면서 처음으로 집체적인 노력에 의해 『한국민주화운동사』 편찬을 시도했다는 느낌을 받았다. 사실 한국민주화운동의 역사는 국호를 대한민국이라고 한 ‘민주 한국’의 역사 쓰기와 다름없다. 그러니까 이 책은 1948년 정부수립 후의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역사를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다룬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발간사에는 이 책을 엮은 목적을 민주화운동을 경험하지 못했거나 운동 밖에 있던 이들에게 민주화운동에 대한 기억공동체를 확산하여 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한 공동체를 확대하기 위

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렇게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올바르게 정립하는 것은 “국가가 왜곡한 기억에 도전하는 것이며 현재진행형인 민주화운동으로서 기억투쟁의 의의를 갖는” 것이다. 그동안 이 방면에 대한 연구 성과가 상당 정도 축적되어 있는데도, 이번에 『한국민주화운동사』를 간행하는 것은 “분산되어 있는 한국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연구 성과물을 종합하고, 이를 통해 민주화운동사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고자 하는 목적에서”였다고 한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 정부수립 제60주년이 되는 2008년부터 시작하여 2010년에 세 권의 『한국민주화운동사』를 완간했다. 따라서 평가는 “거의 반세기에 걸쳐 수백 명이 독재정권에 의해 희생당하고 수백, 수천만 명이 참여했던,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 낸 거대한 드라마”인 대한민국의 역사를 민주화운동이라는 관점에서 서술하려고 애쓴 노력에 먼저 감사하고 그 노고에 치하한다.

이 책은 1948년 이후 약 44년의 대한민국의 역사를 민주화운동이라는 관점을 놓치지 않고 그 맥락을 살피려 했다. 이 책은 유신시대를 한 가운데 두고 세 시기로 구분하여 각 시기를 한 권씩에 담았다.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편집위원과 집필진을 따로 두었다. 다만 편집위원은 1권(6명), 2권(6명), 3권(7명)에 걸쳐 두 분만이 세 권에 모두 참여하고 있다. 아마도 세 권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렇게 유의한 것 같다. 집필진의 경우는, 1권(7명), 2권(12명), 3권(18명) 전체 37분인데, 그중 중복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29분이 참여한 셈이다. 이렇게 많은 집필자들이 참여했는데도 논지의 일관성이 흐트러지지 않은 것은 이 책이 다른 집체(集體)적인 작업과는 구별되는 점이라고 본다.

이 책의 집필자들은 현대사 전공의 역사학자들만이 아니었다. 정치학과 사회학 등에 종사하는 학자들도 참여했다. 때문에 스펙트럼이 매우 넓고 국내의 시대적 환경만을 주시한 것이 아니다. 미국을 비롯하여 국제적인 정황도 제시하면서 독자들에게 균형감 있는 역사인식을 요청하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 이 책은 한국민주화운동을 세계사적 관점에서도 음

미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았다고 생각된다.

이 책의 집필에는 많은 자료들이 활용되었다. 각종 언론과 정부의 공식 자료는 물론이고 그동안의 연구 업적도 활용하고 있다. 이는 자칫 동시대의 역사를 자료의 뒷받침 없이 기억을 통해 서술하려는 ‘모험’을 불식시켜 주며, 많은 자료를 근거로 하여 저자들이 협력하여 이 책을 저술했다는 점에서 독자들을 안심시키고 있다. 이런 자료 수집은 물론 저자들의 각고의 노력도 있었겠지만, 그 못지않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그 동안 수집한 많은 자료를 활용했을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의 민주화운동 자체가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중요한 세계사적 업적이라면, 그 동안 수집한 자료 또한 그 못지않게 이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다.

이 책이 한국의 민주화운동을 최초로 체계화하면서 가장 유념했던 것이 민주화운동의 개념이 아니었는가 싶다. 이 책은 민주화운동의 개념을 나름대로 정리하면서,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민주화운동의 외연을 확대를 시도했다는 것도 엿볼 수 있다. 제2권과 제3권에서 보이는 ‘각 부문에서의 민주화운동’에서는 각 부문별 흐름을 일관성 있게 정리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부문별 민주화운동에 대한 이해를 깊게 만들었다는 것도 들 수 있다.

한계와 과제

그렇지만 이 책에서 아쉬운 대목도 없지 않다. 우선 역사적 용어와 관련, 유의할 대목이 있다. 먼저 제3권 중간에 보이는 ‘5·18민중항쟁’이라는 용어이다. 저자는 법률 등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5·18민주화운동’이라는 용어를 대신해 ‘5·18민중항쟁’을 사용한 이유를 각주에서 석명(釋明)하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은 한국민주화운동사를 처음으로 종합·체계화하는 시도이므로, 후대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5·18민중항쟁’ 용어의 채택은 다소 성급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다. 개인적인 저술에서는 ‘5·18민주화운동’ 대신에 ‘5·18민중항쟁’을 쓸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 책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라는 국가예산이 투입된 공식 기구 명의로 편찬되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5·18민중항쟁’이라는 용어사용의 적정성 여부는 더 논의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이 책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는 ‘운동’, ‘항쟁’, ‘투쟁’ 등의 용어에 대해서도 일정한 활용례를 제시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본다.

용어 문제와 관련, 제3권 4부의 제목으로 뽑은 “노태우정권과 반독재민주화투쟁”이라고 하는 대목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그 제목만 갖고 본다면, 독자들은 노태우정권을 ‘독재정권’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저자의 내면 의식을 읽을 수 있다. 지적해야 할 것은 노태우정권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가의 문제다. 저자가 ‘반독재민주화투쟁’이라고 했을 때 노 정권을 ‘독재정권’으로 의식하고 있음이 분명하다면, 노 정권을 독재정권으로 과연 볼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유신정권이나 전두환정권에 비해서 노 정권은 대통령 직선제 하에서 탄생되었다. 뒷날 3당합당으로 국민이 투표로 만들어준 ‘여소야대’ 정국을 ‘여대야소’ 정국으로 변화시키긴 했으나, 그 정권을 독재정권으로 규정하려고 한다면, 평자 개인의 생각인지 모르지만, 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본다.

이 책의 서술과정과 관련, 간혹 설명이 맴도는 경우가 없진 않지만, 사건의 전개와 발전 과정은 시원하게 설명되는 느낌을 받는다. 그러면서도 때로 그 사건이 갖는 역사적 의미나 자리매김 같은 것이 더 명확하게 제시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갖게 된다. 역사 서술에서는 사건의 전개와 발전 과정을 보여주는 것 못지않게, 그 사건이 갖는 역사적 의미나 민주화운동에서 차지하는 비중, 더 나아가 한국 근현대사에서 자리하는 위치 같은 것도 해석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이 책이 많은 집필자들이 개별적으로 참여한 것이 아니고 편집위원들과 함께 집체적으로 서술한 것이

라면, 더구나 역사적 의의나 해석 문제를 취급할 때에 더욱 치열한 토론이 필요했다고 본다. 역사적 의의를 설명하는 어떤 대목에서는 이 시점에서 상식화되어 있는 정도의 역사적 의미도 설명해내지 못한 경우도 볼 수 있는데,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한국의 민주화운동의 발전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NGO의 등장이라고 생각한다. 가령 198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통일운동 관련 NGO는 손에 꼽을 정도였다. 그러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산하의 통일위원회가 발족한 이래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수많은 통일운동 관련 NGO들이 등장했다. 그렇게 됨으로 종전까지 남북정부만의 배타적 전유물처럼 되어 있던 통일문제가 통일을 실현하고 누려야 할 주체인 민중 차원의 것으로 옮겨지는 극적인 변화가 있었다. 다른 분야의 NGO운동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한국민주화운동에서 빼놓아서는 안 될 이런 부문에 대한 서술이 소홀하게 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을 받는다. 이와 함께 1980년대 후반부터 활성화되는 NGO운동이 민주화운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지도 성찰되어야 한다고 본다.

1987년 박종철, 이한열의 사망을 전후해서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많은 민주열사가 희생되었다. 특히 1991년 ‘5월투쟁’ 기간에 전국적으로 2,361회의 집회가 있었다. 그 과정에서 학생, 빈민, 노동자 등 11명이 분신했고, 한진중공업 박창수 노조 위원장의 의문사와 성균관대 김귀정의 ‘질식사’까지 모두 13명의 희생이 뒤따랐다(3권 472쪽). 한국의 민주화는 이런 젊은이들의 희생을 대가로 실현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책들이 집단의 움직임에 대해서 중점을 둔 나머지, 박종철 사건을 제외하고는 이들 개인에 대한 사실자체를 다룬 것이 소홀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점은 앞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끝으로 한국민주화운동의 기점 문제를 언급함으로 이 글을 끝맺고자 한다. 이 책은 한국민주화운동 서술의 기점을 이승만 정권, 즉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에서 시작했다. 특별히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

의 민주화운동사의 기점을 ‘민주’라는 용어가 제도적으로 주어진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갔으면 하는 기대가 없지 않다. 19세기의 농민운동까지는 몰라도 1919년의 3·1운동과 민주헌법이 제정되고 대한민국이 탄생되는 시점까지는 거슬러 올라가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한국이 제국(帝國)에서 일제 강점 초기를 거쳐 ‘민주 한국’으로 태어나는 것은 민주화운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대목으로 여겨진다. 비록 임시정부라는 기구에 의해 그 존재가 운영되기는 하지만, 한국이 민주공화국으로 탄생한 것이 ‘대한민국’이라면, 한국민주화운동사에서 결코 소홀하게 다루어서는 안 될 것으로 본다. 본문에서 그것을 다룰 수 없다면, 한국민주화운동의 “전사” 혹은 “서론”으로라도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진다.

『한국민주화운동사』 제1, 2, 3권은 2008년 이래 민주화의 역주행을 거듭하고 있는 시대상황에도 불구하고, 민주화 세력이 이룩한 몇 안 되는 괄목할만한 업적으로 보인다. 발간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반민주 지향의 시점에서 “민주화운동 참여자들의 내적 성찰의 근거”가 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한 공동체가 확대”되는 계기를 만들며, 나아가 아직도 민주주의의 확산이 그 과제로 되어 있는 지구공동체에 한국의 민주화 과정을 하나의 전범(典範)으로 보여줄 수 있게 된다면, 이 책 또한 민주화운동사에서 자신의 독특한 위치를 갖게 될 것이다.